

보도시점 2025. 9. 24.(수) 11:00 <9. 25.(목) 조간> 배포 2025. 9. 24.(수)

정부-지자체-발전사, 석탄인력 전환 논의 본격화

-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24일(수) 14시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수용성에 기반한 대체산업 추진과 석탄발전 인력 전환 방안 등 석탄발전 전환의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산업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충남도·경남도, 태안군·보령시·당진시·하동군·고성군),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한자리에 모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탄발전에서 LNG로의 원활한 전환 ▲대체산업별 전환 가능 인력 규모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호현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석탄 인프라의 단순 폐지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한 인력전환과 산업전환 전략이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따라 신규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석탄발전 종사자들이 LNG, 해상풍력, 송전망 건설·운영 등 신산업 분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인력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전환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통해 대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 후속사업의 연속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대체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전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종사자에 대한 인력전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체계적인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에 지역 지원과 에너지 전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호현 차관은 “오늘 논의가 석탄발전 인력의 미래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팀 장	박영진 (044-203-3925)
	전력산업정책과		사무관	류진선 (044-203-3893)



참고**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요**

□ (일시/장소) 9.24(수), 14:00~16:00 (120분) / 석탄회관 4F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 발전사, 지자체, 전문가 등

○ (정부) ^{산업부} 2차관(주재), 지역경제정책관, 고용노동부, 탄녹위 등

○ (공공기관) 남부·동서·중부·남동·서부발전, 한수원,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 (지자체) ^{광역}충남·경남, ^{기초}태안·고성·당진·보령·하동

* '30년까지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 소재 광역·기초지자체

○ (전문가) 부경대 이지웅 교수, 김앤장 이현규 변호사

□ (세부 일정안)

※ 사회 : 전력산업정책과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 개 회	사회자
14:02~14:05	3'	■ 모두 발언	2차관
14:05~14:10	5'	■ 그간의 경과 및 로드맵 등 추진현황	전력정책관
14:10~14:40	30'	■ 석탄에서 LNG로의 원활한 전환 ■ 석탄인력 대체일자리 전망(LNG, 풍력, 송전망 등)	발전5사
14:40~15:55	75'	■ 자유토론 및 협력방안 논의	참석자 전체
15:55~16:00	5'	■ 폐 회	사회자